



# 불나고 녹아내리고...속 터지는 휴대폰 충전기

#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충전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충전기를 평소처럼 휴대전화와 연결했는데 갑자기 연결부에서 연기가 났다. 급히 휴대전화를 분리하고 불을 끄지만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최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량 휴대전화 충전기가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충전기가 파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로 인한 화상 등의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건이 모두 263건이었다. 2011년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0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 263건 중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과열 등으로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는 37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57건이었고, 화상을 입은 사례는 40건(7.2%)이나 됐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품은 온라인 등에서 판

매하는 저가형 충전기로 인증 받은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70%)이 인증 받을 때와 다르게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을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안전인증 표시나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도 9개(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불량 휴대전화 충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량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고, 검증이 된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저가형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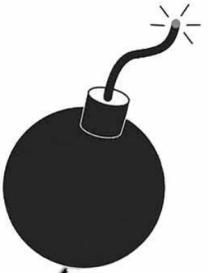
고 말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게시판 사용 후기를 확인해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충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연결한 채 사용하면 내부 과열로 인해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급히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충전을 하지 않을 때는 충전기를 반드시 콘센트에서 분리해야 한다. 집이나 소파 등 불이 붙기 쉬운 곳에 충전기를 두지 않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문제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내놨다”며 “소비자들도 가급적 정품을 사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의약품 부작용 보고 18만건

지난해, 항암제 ‘최다’...증상은 구역질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전년에 이어 18만 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의약품평가, 일반 사용자 등이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만355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고건수는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안전센터가 5곳이 신설돼 정보 수집이 증가했고 국민인식 개선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홍보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효능군 별로 분류해보면 상위 5개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순위는 2013년과 동일했다.

항암성종양제(항암제)가 2만9577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2만2912건(12.5%), X선 조영제 1만4572건(7.9%), 항생제 1만3286건(7.2%), 합성마약 1만1365건(6.2%)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 보고건수는 오심(헛구역질) 2만8141건(15.3%), 가려움증 1만6868건(9.2%), 두드러기 1만5014건(8.2%), 구토 1만4929(8.1%), 어지러움 1만4256건(7.8%), 발진 1만2081건(6.6%), 설사 6768건(3.7%) 등의 순으로 빈번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적정가는 얼마...공정위로 간 ‘개고기 값’

보신탕 가게, 식용견단체 담합 혐의 제소

전사협 “손익분기점 사수하려는 것 뿐”

보신탕에 쓰이는 개고기 가격을 놓고 요식업계와 식용견 사육업자들 사이에 벌어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불뚱이 튀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보신탕 가게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전국사육농가협의회(이하 전사협)와 대한육견협회 중앙회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전사협은 대한육견협회와 전국 개 사육장 간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결성됐다. 이들을 제소한 보신탕 가게는 “전사협이 사육농가 업주들에게 ‘협의회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격을 일괄적으로 담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급가격이 40~50%나 높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식당 측은 “전사협은 지난달 근당(400g) 63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유통마진이 붙으면 식당에 공급되는 개고기 가격이 근당 7800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는 예년 가격(근당 5000~6000원)보다 훨씬 비싼 것이라고 한다.

식당 관계자는 “재료값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며 “그럼에도 손님이 떨어질까 봐 다들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간신히 연명만 하는 것이 조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의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보신탕 가게들이 집단제소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육업계는 지금껏 개고기 가격을 담합해 온 주체는 사육업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이며, 식당들도 이를 방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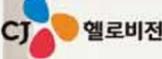
전사협 출범으로 사육업자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유통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정하던 관례가 깨진 것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사협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는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무조건 그 이하로 개고기를 공급해야 했다”면서 “그런 까닭에 지난해 가을의 경우 근당

7200원대까지 올랐던 공급가가 한순간에 4500원까지 폭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 사육자 입장에선 근당 5500원은 받아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가 매년 반복돼 온 것”이라며 “전사협을 결성해 맞대응한 것을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도 “소비량을 무시한 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식당 측을 부추겨 개 사육자들을 악당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였?”

[www.cjhellovision.com](http://www.cjhellovision.com)